

문 26.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. 예비군법령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甲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소속 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 경우, 관할 군사령관은 치료비를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- ㄴ.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ㄷ. 甲의 가족은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- ㄹ. 甲에게 부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보고받은 국방부장관은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① ㄱ, ㄴ

② ㄱ, ㄷ

③ ㄴ, ㄹ

④ ㄷ, 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2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·시행하는 계획, 점검·검사, 교육·훈련,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.
- ④ 경찰청장, 소방청장, 문화재청장, 산림청장,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문 30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·운용하여야 하고,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,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,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·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문 3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문 3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문 3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(主)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.
-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.

문 3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
- ㄴ. 안전관리현장의 제정·고시
- ㄷ.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
- ㄹ. 안전지수의 개발·조사 및 그 결과 공표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35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ㄴ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.
- ㄹ.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. 12. 31.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. 9. 25.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